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4, No. 130, pp.145-185
<https://doi.org/10.29212/mh.2024..130.145>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동향과 과제*

- 사료와 현장을 중심으로 -

고종성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전사자 유해발굴의 사회적 인식 변화
 3. 사료를 통한 6·25전쟁 '전사자' 연구
 4. 현장을 통한 전사자 '유해발굴' 연구
 5. 6·25전쟁 전사자 연구의 향후 과제
 6. 맺음말

초 록 본고는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이뤄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이하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한국현대사의 범주 안에서 정리했지만, 연구주제의 특성상 인류학, 고고학 등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된 인접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도 상당수 포함됐다.

* 본고가 나올 수 있도록 조언해주신 심사위원 및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전사자 유해발굴은 당초 인류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초기 연구가 시작됐다. 그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상징으로 보는 한편, 국민의 사회소속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았다.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인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사료와 기록의 부족이 지적되자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은 공간적으로는 국내를 넘어 국외의 사료들을 발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범주의 사료와 기존 연구 간의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며 사료적 가치를 탐색했다.

한국고고학 역시 인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문화적 행위를 재구성하고 사회의 과거사를 밝혀내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과거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과정까지도 고고학에서 다뤄야 할 분야로 판단한 고고학 연구자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에 고고학적 조사방법론을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해외 산업고고학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근현대고고학’의 시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연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연구들은 학제 간 교류를 통해 심층적인 비교·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6·25전쟁 70주년인 2020년을 전후로 전사자 유해발굴의 범위가 비무장지대(DMZ)까지 확장되는 등 성과가 축적되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보고되며 전사자 연구가 다양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정전협정 70주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전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6·25전쟁의 전장정리(戰場整理) 즉, 6·25전쟁의 진정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주제어 : 6·25전쟁, 한국전쟁,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유해, 유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근현대고고학

(원고투고일 : 2024. 1. 7, 심사수정일 : 2024. 2. 20, 게재확정일 : 2024. 2. 22.)

1. 머리말

본고는 2000년대부터 국내에서 이뤄진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이하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동향을 정리하였다. 한국현대사의 범주 안에서 정리했지만, 연구주제의 특성상 인류학, 고고학 등 전사자 유해발굴과 관련된 인접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도 상당수 포함되었다.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시작된 전사자 유해발굴은 당초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처음 접근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 당시부터 전사자 유해발굴은 국가를 지켜낸 국민을 국가가 다시 책임지는 상호 관계 확립의 역사적 사례로 해석되었다.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특성상 인류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6·25전쟁 전사자와 전사자 유해발굴을 전후(戰後) 세대가 어떻게 인식해왔는지에 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를 살펴보고 본 연구의 주체인 ‘전사자(戰死者)¹⁾’, 그리고 전사자를 실증적으로 연구하기 위한 방법론 중 하나인 ‘유해발굴(遺骸發掘)’ 이상 3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성과를 정리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주체인 6·25전쟁 ‘전사자’ 부분에서는 부족한 전사

1) 6·25전쟁에 참전한 군대의 국적은 유엔군, 한국군, 북한군, 중공군으로 분류된다. 통상 ‘적군’으로 통칭하는 북한군과 중공군 전사자의 경우, 북한 소재 유해 매장 추정 지역에 관한 보고와 적군 묘지에 관한 연구 등 극히 제한적인 연구성과가 존재한다. 따라서 본고에서 지칭하는 6·25전쟁 ‘전사자’의 연구성과들은 사료적인 한계로 인해 통상 ‘아군’으로 통칭하는 유엔군(그중에서도 주로 미군)과 한국군에 국한된다.

자 관련 기록을 보완하기 위해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응했는지 살펴보는 한편, 6·25전쟁 전사자가 발생한 이후 국내외 1차 사료 중심으로 전사자의 수습-송환 과정을 살펴본 한국현대사 관련 연구들을 소개한다.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 부분에서는 전사자 유해발굴이 고고학적 연구방법론을 갖춘 과정을 정리하고 한국고고학이 전사자 유해발굴을 이른바 ‘근현대고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연구성과들을 소개한다. 더하여 위와 같은 연구동향을 바탕으로 전사자 유해발굴 연구의 향후 과제와 방향에 관해서도 고찰해보고자 한다.

소개하는 연구들은 학술논문 중심으로 정리하되 연구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분야는 보고서, 논고, 발표문까지도 상세하게 살펴보고 연구가 상대적으로 진척된 분야는 학위논문과 저서를 중심으로 정리했다.

2. 전사자 유해발굴의 사회적 인식 변화

전사자 유해발굴의 연구성과는 언제부터 6·25전쟁 전사자의 존재가 부각되었는지 여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먼저 전사자 유해발굴 초기의 연구성과를 중심으로 6·25전쟁 전사자의 사회적 인식 변화에 대해 정리하고 그다음으로 ‘전사자’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전사자는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발생하였다. 한국군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생하는 전사자의 체계적인 수습 방안을 마련할 여지나 경험 없이 전쟁을 수행했다. 1950년 9월이 이르러서야 ‘묘지등록대’를 창설하였고 1951년부터 영현중대로 확대되었지만,

임시매장이나 화장된 전사자 처리에만 집중했을 뿐, 1953년 7월 정전협정 이후에도 전국에 흩어져 있는 전사자들을 수습할 근본적인 여건은 갖추지 못하였다.²⁾

1960년대부터 육군본부와 전우회 중심의 간헐적인 전사자 유해 수습시도가 있었지만 1990년대까지도 전사자 수습을 위한 근본적인 체계는 갖추지 못하였다. 이후 1996년부터 북·미 협상을 통해 북한지역에서 양국이 공동 유해발굴을 시작하면서 전사자 유해발굴의 국제적인 관심도가 증가했다. 대한민국 정부 역시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2000년 6월 25일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전사자 유해의 DNA 정보와 유품 등을 단서로 일부 전사자 유해가 유가족에게 인계되는 성과가 나타나자 전사자 유해발굴은 범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었다.³⁾ 이에 따라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보고와 그에 따른 연구 또한 점차 활성화됐다.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는 민·관·군 합동의 한시적 조직이었기 때문에 2000년부터 시작된 전사자 유해발굴은 육군 본부의 통제하에 충북대학교 유해발굴센터와 함께 이뤄졌다. 당시 유해발굴사업에 참가한 인류학 연구자들은 유해발굴 보고서를 발간하면서 연구성과를 내기 시작했다.⁴⁾ 대표적으로 박선주

2) 2000년대 초에 6·25전쟁 전사자의 수습을 구체적으로 다룬 연구로는 이남우의 연구가 있다. 이남우는 국방부, 육군본부의 사료들과 유해발굴기록 그리고 참전 군인들의 증언을 토대로 1950년대 영현중대의 조직 변화와 전사자 수습과정을 세부적으로 밝혔다. 이남우, 「전시체제의 한국군 상·장례 절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장례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그러나 현재까지도 발굴되고 있는 전사자 유해의 존재는 6.25전쟁 당시 영현중대 운용의 물리적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3)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경과와 현황에 관해서는 고충성,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군사』 제123호, 2022. 참고.

4) 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센터장: 박선주)는 2000년 봄부터 발굴을 시작하여 2007년 8월까지 2,000여 구의 유해를 발굴하고 감식작업을 담당했다. 2006년까지 발굴한 전사자 유해의 인류학적 분석을 실시하여 당시 전쟁을 수행한 전사자들의 해부학적 특성을 밝힐 수 있었으며 이들의 건강상태와 사회적 신분을

는 충북대학교 유해발굴센터를 이끌며 2007년 국방부 유해발굴 감식단(이하 국유단) 창설 이전까지 민간 연구자로서 전사자 유해발굴 연구를 주도했다.⁵⁾ 박선주는 이때 이미 전사자 유해발굴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상징으로 보는 한편, 국민의 사회소속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보았다.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인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⁶⁾

권현익 역시 당시 영국 사회과학원 프로그램(2004-2005)의 일환으로 국내 전사자 유해발굴현장을 살펴보면서 제1, 2차 세계대전 전후 유럽의 전사자 매장 문화, 베트남전쟁 이후 미국의 경험과 국내의 전사자 유해발굴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떤 유사성과 차이점이 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⁷⁾ 권현익은 당시 국내의 유해발굴사업이 기존 형질인류학(Physical Anthropology/체질인류학)⁸⁾과

기능할 수 있는 기본자료가 축적되었다. 유해발굴의 중요목적인 피아구분과 신원확인도 실시하여 방법론의 확립과 일부 전사자 유해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들 방법은 현재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 인용되고 있다. 그동안 모두 6권의 발굴보고서와 1권의 종합보고서를 발간하여 한국의 전사자 유해발굴 조사연구 및 민간인 희생자 유해발굴조사의 인류학적 연구의 기초를 닦았다. 박선주,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발굴과 보존」,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23, 10쪽.

- 5) 박선주, 「6.25전사자 유해발굴조사 : 6.25 전사자유해의 인류학적 조사 -2000~2002년도 발굴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6호, 2002; 「2004년도 6.25 전사자 유해발굴의 인류학적 조사」, 『2004년 6·25전사자 유해 발굴보고서』,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4; 「6·25 전사자 유해발굴의 성과와 과제」, 『2005년 6·25전사자 유해 발굴보고서』,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5; 「6.25 전사자유해 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보』 제33호, 2006.
- 6) 박선주, 「6.25 전사자유해 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보』 제33호, 2006, 70-74쪽.
- 7) 권현익, 「전사자 유해와 현대사회」, 『2004년 6·25전사자 유해 발굴보고서』,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사 유해발굴센터, 2004.
- 8) 인간의 생물학적 진화 양상에 관해 연구하는 학문으로써 법의인류학, 고인류학 등을 포함한다. 사람의 뼈대를 주요 연구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골학(Osteology)을 기본

고고학 방법론을 심분 활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박선주와 마찬가지로 전사자 유해발굴이 인류학적 지식 이외 전쟁사 등 역사적 지식을 요구한다고 지적했다.⁹⁾

위와 같이 전사자 유해발굴 현장에서 보고와 연구가 이뤄지는 가운데 노용석은 2008년부터 6·25전쟁의 전투지역이 아닌 민간인 학살 현장에서 민간인 유해발굴에 참여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사자 유해발굴과 민간인 유해발굴의 사례를 비교분석 하였다. 노용석은 6·25전쟁기 전사자와 민간인 유해발굴에 관해 동일한 시기에 벌어진 죽음을 수습하기 위해 유해발굴이라는 수단을 택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의도와 내용에서는 확연한 차이점을 보인다고 지적했다.¹⁰⁾

한편, 전사자 유해발굴과는 별개로 전사자를 기억하고 예우하고자 전사자를 매장하는 행위, 더 나아가 전사자 묘지를 중심으

적으로 다룬다. 최근에는 생물인류학(Biological Anthropology)으로 불린다. 여기서 언급되는 체질인류학은 전사자 유해 즉, 인골(人骨)을 분석하는 연구이다. 한 국내의 체질인류학적 연구성과는 다음과 같다. 장유량, 「대퇴골의 법의인류학적 인종 특징 분석」, 경북대학교 의학과 박사학위 논문, 2011; 임나현, 「한국인 머리뼈의 윗머리이음새」, 충북대학교 사학과 고고미술사전공 박사학위 논문, 2012; 박정상, 「한국인 치아 석회화정도 : 2009년도 6.25전사자 발굴유해를 중심으로」, 경북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고고학 전공 석사학위 논문, 2013; 장유량 외, 「집단으로 매장된 유해의 골절양상 분석 -양주 신암리, 익산 금강변, 창녕 본초리 사례를 중심으로-」, 대한체질인류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2018; 장유량 외, 「DMZ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된 6·25 전사 서양인 사람뼈에서 발견된 쉬모를 결정과 불완전 허리뼈되기」, 『해부·생물인류학』, 대한체질인류학회, 2019.

9) 권현익, 위의 논고, 186-187쪽.

10) 노용석은 전사자 유해발굴이 국가의 책임을 강조하는 국가성(Nationality)을 내포하는 반면, 민간인 유해발굴은 '국가에 의한' 죽음을 대상으로 삼으면서 국민 국가의 폭력성과 과오를 드러내는 과거청산의 중요한 기제로 사용된다고 주장했다. 노용석, 「죽은 자의 몸과 근대성 : 한국의 전사자,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발굴 연구」,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234쪽. 노용석의 연구에서도 지적되었다시피 전사자 유해발굴과 민간인 유해발굴은 '유해발굴'이라는 방법론만 공유할 뿐, 연구의 주제와 성격에서부터 확연한 차이점이 있다. 향후 위 두 가지 유해발굴 연구 간에 별개의 접근방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로 한 추모시설 조성을 비판적인 관점¹¹⁾으로 바라보는 연구 또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연구는 주로 서양의 전사자 묘지 조성 및 예우 사례를 비교하여 전쟁 전사자라는 존재를 이해하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진다.

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자로는 다카하시 데쓰야와 하상복이 있다. 다카하시 데쓰야는 전쟁 중 국가에 의한 국민의 희생에 관해 일본과 한국 유럽 등의 사례를 비교하여 국가가 조국을 위해 순국한 전사들을 강조하는 현상은 세계사적 전통이며 이러한 전사자 예우의 전통이 근대 민족국가 시대에 정점에 이르렀다고 보았다.¹²⁾ 하상복 역시 프랑스의 뱅떼옹(Panthéon), 미국의 알링턴 국립묘지 그리고 한국의 국립 현충원의 건립 사례와 과정을 비교하면서 전사자에 관한 추모시설 조성이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¹³⁾

이상의 연구들을 보면 알 수 있듯이 6·25전쟁 전사자는 2000년부터 시작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맞물리면서 그 존재를 본격적으로 조명받았다. 또한, 위와 같은 연구성과는 6·25전쟁 전사자의 존재를 부각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전후(戰後) 세대가 전사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일부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적인 추모 혹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전사자 문제를 규명한 것으로 전사자에 관해 실증적인 접근을 한

11) 국가 주도의 전사자 예우를 명명하는 단어로 ‘전사자 숭배(Worship of the fallen soldiers)’라는 용어가 사용되는데 이는 독일 출신의 미국 역사가 조지 모스(George L. Mosse)가 1990년 저서 『Fallen Soldiers : Reshaping the Memory of the World Wars』에서 사용한 용어이다. 조지 모스는 제1, 2차 세계대전의 독일 전사자들이 국가에 의해 어떻게 정치적으로 활용되었는지 고찰하였다. 조지 L. 모스 저, 오윤성 역, 『전사자 숭배 : 국가라는 종교의 희생제물』, 문학동네, 2015; 최호근, 「제1차 세계대전과 독일의 전사자 숭배-플랑드르 지역의 군인묘지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155호, 2022, 160쪽.

12) 다카하시 데쓰야 저, 이목 옮김, 『국가와 희생』, 책과 함께, 2008, 12쪽, 239-251쪽.

13) 하상복, 『죽은자의 정치학』, 모티브북, 2014.

것은 아니었다. 특히 앞의 연구들에서는 6·25전쟁 중 전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조직과 절차를 거쳐서 수습 또는 송환되었는지에 관한 과정이 생략됐다는 한계점이 존재했다.¹⁴⁾

이와 같은 경향에 관련하여 이상호는 전사자 수습과정이 배제된 체 전투 후 바로 국립묘지라는 공간의 이동은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일반 대중의 의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다.¹⁵⁾ 결국, 이러한 한계점은 국내외 1차 사료 및 전사자 유해발굴 성과에 기반을 두는 6·25전쟁 전사자의 실증적인 연구로 이어졌다.¹⁶⁾

3. 사료를 통한 6·25전쟁 ‘전사자’ 연구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6·25전쟁 ‘전사자’ 연구는 2000년부터 시작한 전사자 유해발굴사업과 맞물리면서 그 존재를 본격적으로 조명받았기 때문에 현재 전후 세대가 전쟁 전사자를 어떻게

14) 고종성, 앞의 논문, 5쪽.

15) 이상호, 「베트남전쟁 파병 국군 전사자 현황과 국내 언론 보도」, 『역사와 현실』 제116호, 2020, 105쪽. 해당 연구에서 이상호의 비판은 기존 베트남전쟁의 사회사적 연구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전쟁사에서는 작전과정 중 전사자가 발생할 경우 그 유해를 어떻게 처리했는지에 관해서는 제대로 된 연구가 거의 없었다.”라는 선행 연구에 관한 이상호의 지적 역시 사실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상호의 비판은 비단 베트남전쟁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전사자 연구에 관한 일반적인 인식으로도 볼 수 있다.

16)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성과가 보고되고 관련 연구가 활성화되자 강인철은 축적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전쟁과 희생이라는 관점에서 한국의 전사자 숭배에 관하여 연구하였다. 강인철은 특히 6·25전쟁기 영현부대를 통한 전사자의 수습과 의례 그리고 국립묘지로 이어지는 전사자의 예우 과정을 심층적으로 고찰하면서 전사자의 숭배와 애도 사이에서 비판적인 성찰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강인철, 『전쟁과 희생 :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받아들여야 하는지 규명하는 연구가 선행되었다. 이후 전사자 유해발굴이 대내외적 관심을 받게 되자 정부는 2003년 7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 종료 후에도 전사자 유해발굴을 지속하기로 함으로써 민·관·군 합동 유해발굴사업은 2007년까지 이어졌다. 이에 국방부는 지속적인 유해발굴을 위해 미국의 사례와 같이 독자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부대 창설을 준비하였고 2007년 1월 1일, 국유단이 창설되어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전담하게 되었다.¹⁷⁾ 국방부는 국유단과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이하 군편)를 중심으로 6·25전쟁 전사자와 관련된 보고서를 꾸준히 발간하였다.¹⁸⁾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국가영구사업이 되면서 전사자 관련 연구 또한, 자연스럽게 지속되었다. 박선주, 권현익 등의 선행연구자들이 지적했다시피 6·25전쟁 전사자를 연구하면서 인류학적인 접근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에 따라 6·25전쟁 전사자를 6·25전쟁사 속에서 다루려는 연구가 시작되었다.

김성보는 6·25전쟁 50주년 당시 이루어졌던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을 지켜보면서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가능성과 과제를 제시하였다.¹⁹⁾ 그는 종전의 6·25전쟁사가 전투 과정만을 나열하는 전투사 혹은 특정 인물의 정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실상을 파악하

17) 고종성, 앞의 논문, 19-22쪽.

18) 국유단은 매년 현장의 발굴보고서와 유해를 감식한 감식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다만 군 관련 보고서이기 때문에 극히 일부만 제한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군편 역시 그동안 축적된 6·25전쟁사를 기반으로 한반도 전 지역에 전투별 전사자 유해 추정 지도를 보고한 바 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유해감식 결과 보고서』, 201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유해소재 분석지도(DMZ/남한지역)』, 2009; 『6·25전쟁 유해소재 분석 지도(북한지역)』, 2010.

19) 김성보, 「한국전쟁기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전쟁사 연구의 과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6호, 2002.

지 않고는 전쟁의 전체 실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적인 통계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출신 배경, 생각과 정서, 군내에서의 경험, 처우, 삶의 변화 등 군인들의 내면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6·25전쟁사 측면에서 전사자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봤다. 김성보는 특히 전사자의 유품에 주목하여 전사자 유해 주변에 남겨져 있는 전쟁의 흔적들을 조사하는 연구의 병행이 필요함을 강조했다.²⁰⁾

한편, 양영조는 6·25전쟁 격전지와 전사자 유해의 지역 분포를 비교하고 이를 기존의 전투사 연구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 양영조는 2000년대부터 2016년까지 남한지역에서 발굴된 전사자 9,645구를 대상으로 지역적 분포를 분석해 볼 때 강원지역이 5,600구, 경북지역이 2,415구, 경기지역이 1,848구순으로 가장 많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전사자의 분포는 기존 6·25전쟁의 전투사를 비교적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6·25전쟁 당시 한국군이 전사자 수습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물리적 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전사자 연구를 전쟁사 측면에서보다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성을 강조했다.²¹⁾

20) 김성보, 앞의 논문, 25-27쪽; 고종성, 앞의 논문, 6쪽.

21) 양영조, 「6·25전쟁과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239-241쪽; 고종성, 앞의 논문, 7쪽.

〈사진 1〉 한국군 전사자 고 유광연 일등 상사가 소지했던 카빈 소총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소장)



〈사진 2〉 경북 영주시 평은리 출토 버클 (110725 영주 평은리 무명 427고지군 호165-유해1)



* 출처 : 고종성,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군사』 제123호, 2022.

고종성은 위와 같은 방향성에서 한층 더 나아가 전사자 유해발굴을 한국현대사의 관점 안에서 고찰하고자 시도했다. 전사자 유해발굴을 6·25전쟁사의 관점에서 다룰 때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할 사료(史料)²²⁾에 관해 고종성은 양영조 등이 지적한 전사자 기록의 부족을 보완하고자 우선,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한 전사자 유해와 유품이 사료로서 가치를 지닐 수 있는지 검토했다.

고종성은 1950년대부터 2020년대까지 전사자 수습 및 유해발굴의 경과와 현황을 정리하는 한편, 6·25전쟁 초기 대표적인 전투지역이었던 경상북도의 전사자 유해 규모를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영천과 포항 등 일부 지역에서 기존에 보고된 전사자보다 더 많은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음을 확인하였다.²³⁾ 또한, 김성보가 선행연구에서 지적했던 전사자 유품(遺品)에도 주목하여 〈사진 1〉과 같은 총기류를 포함한 전사자 유품이 단순히 전

22) 사료(史料)는 인간의 과거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단서가 되는 모든 자료로써 역사 연구 및 편찬에 필요한 문헌(文獻)이나 유물(遺物) 등을 포함한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3) 6·25전쟁 전사자 규모에 관한 통계는 국방부에서 전사(戰史)를 종합하여 작성한 바 있다. 하지만 전사자 통계 대부분이 전쟁 중에 추산한 수치이기 때문에 완벽한 정확도를 장담하기 어렵다. 따라서 해당 지역에서 발굴된 전사자 유해의 규모는 6·25전투사를 재검토 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

사자의 피아구분 및 신원확인의 참고자료 역할뿐만 아니라 1950년대 6·25전쟁기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료로서 가치를 지니고 연구 및 전시 등에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사진 2>와 같이 2011년, 경북 영주 고지군 출토 버클에 새겨진 민족지상(民族至上), 국가지상(國家至上)의 문구를 근거로 해당 버클이 1946년에 이범석(李範奭)이 결성한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靑年團, 약칭 ‘족청’)의 것임을 밝혀내어 전사자 유품의 사료적 가치에 관해 검토한 것이 주목할 만하다.²⁴⁾

그러나 위와 같은 고종성의 연구는 전사자 유해와 유품과 같이 주로 유물(遺物)로 구분되는 출토 자료에 주목한 나머지 전사자와 관련된 문헌과 기록 등 직접적인 1차 사료(Primary Sources)에 관한 고찰이 결과적으로 배제된 측면이 있다. 한편, 국내외 1차 사료를 중심으로 전사자 송환 과정에 관해 천착한 연구도 있다.

조성훈은 정전협정 당시 회의록과 미군 자료를 중심으로 6·25전쟁 당사국 간의 유해교환 성과와 한계에 관해서 조명하였다.²⁵⁾ 조성훈은 우선 군사정전위원회 회의록을 통해 전사자 유해발굴 및 송환의 가장 중요한 근거²⁶⁾가 되는 정전협정 13항 ‘남’목²⁷⁾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당사국 간 조율 과정

24) 고종성, 앞의 논문, 25-51쪽.

25) 조성훈, 「정전협정 직후 유해교환 성과와 한계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2집, 2020.

26) 1953년 정전협정 이전 전쟁 사망자 및 포로에 관한 인도적 조치는 1949년 제네바 협약에 근거한다. 제네바 협약은 전쟁 전사자에 관해 육전과 해상에서의 약탈방지, 신원 판별, 사망 확인 및 매장, 사망자 인양 요청, 포로의 사망에 관한 제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정전협정의 항목들 역시 국제협약의 성격을 가진 제네바 협약의 인도적 조치가 근거한다고 볼 수 있다. 박중섭은 전사자 유해발굴이 제네바 협약에서 정전협정으로 이어지는 인도법에 근거한 조치임을 밝힌 바 있다. 박중섭, 「한국전쟁 사망군인 유해발굴의 인도법적 의의」, 『인도법논총』, 2006.

27) 매장(埋葬)지점이 있고 분묘(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에 그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

을 밝히는 한편, 정전협정 이후 설치된 분묘등록위원회의 회의록을 중심으로 1954년에 당사국 양측에서 이뤄진 전사자 유해교환²⁸⁾의 과정을 살펴보면 그 성과와 한계를 고찰했다. 특히 조성훈은 상기 1차 사료를 통해 각 당사국이 공식적으로 언급한 각국 전사자의 수치를 근거로 비무장지대와 북한지역의 아군 전사자 유해 규모를 추정해 향후 이뤄질 전사자 유해발굴에 기여하였다.²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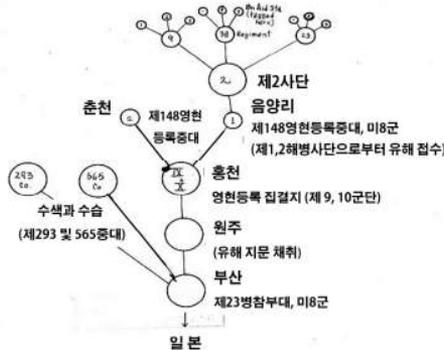
이정선은 미국 문서기록관리청(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약칭 ‘NARA’) 소장 RG 92 문서군을 중심으로 미군이 자국의 전사자를 일본을 경유하여 미국 본토로 송환한 과정을 자세히 밝혔다.³⁰⁾ 이정선은 전체 유엔군 전사자의 89%를 차지하는 미군이 한국 내 마련된 유엔묘지³¹⁾에 자국 전

국 지역의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 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 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上記)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 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2001, 172쪽.

- 28) 위와 같은 정전협정 제13항 ‘b’ 목에 따라 1954년 8월 17일 군사정전위원회 제 47차 본 회의에서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 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를 비준했다. 이 행정상 세목의 양해에 따라 1954년 9월 1일부터 양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유엔군 측 전사자 4,091구와 북한군과 중공군 측 전사자 13,528구가 일괄 상호 송환되었다. 박중섭, 위의 논문, 2006, 242-243쪽.
- 29) 조성훈은 이미 북한 포로수용소의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 지역의 국군포로 사망자의 유해발굴 가능성을 추정한 바 있다. 조성훈, 「6·25전쟁 중 북한 포로수용소 실태와 국군포로 사망자 유해발굴 가능성」, 『군사』 제75호, 2010.
- 30) 이정선,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는 왜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았는가?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지 중 동시 송환 정책과 일본 고쿠라(小倉)에서의 신원 확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40호, 2020.
- 31) 유엔묘지의 탄생과 건립 관한 연구는 국립묘지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전사자 수습의 마지막 과정인 안장과 예우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유엔묘지에 관한 최근의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김שמ·우신구·차성환 외, 『국제평화도시의 환상을 넘어 : 유엔기념공원과 부산』, 선인, 2013; 정성운, 「유엔기념공원의 중층적 정체성과 구조적 문제점 -묘역의 공간구성과 의미구조를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38호, 2019; 이정선,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유엔기념공원의

사자를 안장하지 않은 이유에 관한 의문점을 가지고 그 배경을 추적했다. 그 결과 이정선은 NARA의 RG 92 문서군 등을 통해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Policy of Concurrent Return of Bodies)의 존재를 확인하고 일본 고쿠라(小倉)에서 실시한 미군 전몰장병의 신원확인 및 감식 그리고 송환과 관련된 1차 사료를 국내 학계에 처음으로 밝혔다.³²⁾

〈사진 3〉 6·25전쟁기 한국-일본간 전사자 유해 이동 경로



* 출처 : 이정선,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는 왜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았는가」, 『항도부산』 제40호, 2020, 298쪽.

유산 해석 전략 연구 : 벨기에·프랑스의 ‘제1차 세계대전의 장례와 추모 유산 사례를 참고로, 『문화정책논총』 34, 2020; 「유엔묘지에서 재한 유엔기념묘지로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1955~1960년을 중심으로-」, 『군사』 제119호, 2021; 「1951년 유엔묘지 전몰장병 헌정식 -1950~1951년 임시 유엔묘지의 통합에서 헌정식에 이르는 과정 고찰-」, 『항도부산』 제42호, 2021; 전성현, 「한국전쟁기 유엔한국묘지(적군묘지)의 구성과 의미」, 『사회와 역사』 제132집, 2021.

32) 미국이 자국 전사자를 본토로 송환하기 위해 일본 고쿠라를 경유하였다는 사실은 이전에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 이상호 역시 이정선과 비슷한 시기에 군편의 공간사(公刊史)를 저술하며 언급하였다. 최용호 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013, 12쪽; 이상호, 『6·25전쟁기 유엔군 군사지원체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22, 243쪽. 그러나 이정선은 위와 같은 언급에 그치지 않고 고쿠라에서 실행된 전사자 감식과 송환 과정을 자세히 서술하여 미군의 전사자 송환 정책이 어떠한 정치·역사적 의의를 지니고 있는지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정선은 <사진 3>과 같이 한반도 각지의 미군 전사자 유해가 부산을 거쳐 일본 고쿠라 항을 경유하여 미국 본토로 이송되는 경위를 되짚어 보았다. 그리고 1951년 1월 일본 규슈 고쿠라 부대(Camp Kokura)에서 미국 영현 등록 업무가 개시되고 미 군사상 최초로 해외 전장지에서 전사자 유해 수습과 본국 송환이 시작되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그 과정에서 미 극동사령부 병참단 직할 영현등록부대가 설치되었으며 이에 따라 고쿠라 부대 내에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중앙식별반(Central Identification Unit, 약칭 'CIU50')이 설치되었다는 점도 밝혀냈다. 특히 전사자 신원확인 및 유해 감식 업무에는 극동사령부와 미 전역에서 파견된 사체 방부처리 기술자(embalmer) 그리고 유럽, 미국, 일본의 인류학자 등 현재와 유사한 전문 감식 인력이 투입되었다는 점을 밝혀낸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다.³³⁾

전사자 유해발굴의 활성화는 곧 6·25전쟁 전투사의 활성화로도 이어졌다. 대표적으로 박동찬은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전투의 시기별 양상과 특징에 관해서 고찰하였다. 기존의 화살머리고지는 1952년 10월에 프랑스군이, 1953년에 한국군 제2사단과 중공군이 치렀던 고지쟁탈전 정도로 인식되어 있을 뿐, 관련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그러나 2019년 4월부터 남북 공동유해발굴에 의해 화살머리고지 전투가 주목받기 시작하자 박동찬은 한국과 미국 그리고 중국의 지휘보고서와 전투상보 등을 중심으로 화살머리고지 전투의 전황을 폭넓게 살펴보며 약 2년간 총 4차례 이뤄진 화살머리고지 전투가 백마고지 전투와 더불어 철원지역 확보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전투였음을 강조했다.³⁴⁾

33) 이정선, 앞의 논문, 2020, 282-301쪽.

34) 박동찬, 「1951~1953년 화살머리고지 전투의 시기별 양상과 특징」, 『6·25전쟁과 철원』, 태봉학회, 2020. 해당 연구에서 박동찬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화살머

또한, 미국의 1차 사료와는 별개로 국내에 산재한 다양한 사료로 전사자를 바라보는 연구도 이뤄지고 있다. 이윤정은 6·25전쟁 당시 전사한 순직경찰관 합동추도회 사진첩을 중심으로 경찰 전사자의 의례 과정을 고찰했다. 이윤정은 경찰 전사자의 예우 과정을 살펴보는 한편, 사진 자료에 수록된 경찰 전사자 위패 등을 분석하여 그동안 포괄적으로만 알려져 있던 경찰 전사자들의 시기별 수치를 보다 구체화하였다. 이윤정 역시 새로운 사료를 기존 사료와 비교·분석하는 방식으로 사진첩의 사료적 가치를 검토함으로써 한국군보다 상대적으로 사료가 부족한 6·25전쟁 참전 경찰 전사자 연구에 이바지했다.³⁵⁾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사료와 기록의 부족이 지적되자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은 공간적으로는 국내를 넘어 국외의 사료들을 발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사료의 범위를 보다 다양화하여 기존 연구와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며 사료적 가치를 탐색하고 있다.

4. 현장을 통한 전사자 ‘유해발굴’ 연구

앞서 언급했듯이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던 6·25전쟁 ‘전사자’의 기록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외 다양한 사료 발굴의 노력이 기울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사자 ‘유해발굴’ 역시 전사자를 책임지는 국가 차원의 보훈적 예우임과 동시에 전사자를 연구하는 방법론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리고지 전투가 유해발굴사업을 계기로 주목받았음을 분명히 밝히면서 기존 연구에 더하여 국내의 사료를 통해 화살머리고지 전투를 상세히 고찰하였다.

35) 이윤정, 「한국전쟁기 경찰 전사자 의례와 기록사진」, 『한국연구』, 2022.

2007년 창설된 국유단은 전사자 유해발굴의 과정을 조사 및 탐사 - 발굴 및 수습 - 신원확인(감식) - 후속조치(안장 및 송환 등)와 같이 총 4단계로 나누고 있다.³⁶⁾ 특히 매년 실시하고 있는 전사자 유해발굴의 모든 과정은 전사자 유해와 유품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 인력에 의한 문화재³⁷⁾ 발굴기법을 적용하는데 이것이 곧 고고학 발굴기법이라고 볼 수 있다.³⁸⁾

한국의 고고학적 과거를 연구하는 한국고고학은 한민족 혹은 한국문화의 연원이 된 다양한 역사·문화적 단위의 실체 확인과 성격 규정을 중요한 연구목적의 하나로 삼는다.³⁹⁾ 이번 장에서는 유해발굴에 고고학이 도입되는 전개 과정과 한국고고학이 현재의 유해발굴을 이론적으로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관한 연구를 소개한다.

본격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고고학적 시각에서 검토한 연구자로는 안신원이 있다. 안신원은 유해발굴을 전사자 유해발굴과 민간인 유해발굴로 구분하고 두 가지 다른 성격의 유해발굴에 대해 미국, 남미 등 해외 유해발굴 사례와 비교하며 고고학적 의미를 고찰하였다. 안신원은 고고학이 다루는 주된 연구주제인 죽음과 유해발굴의 접점을 강조하며 고고학은 지금까지 죽은 자를 통해 인간의 문화적 행위를 재구성하고 과거사의 단면을 밝혀내고자 노력했으므로 6·25전쟁 전사자 연구 역시 고고학적 맥락 속에서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⁴⁰⁾

3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유해발굴 추진절차’ (www.withcountry.mil.kr / 2023.10.5. 검색)

37) 2023년 7월 18일부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등 10개 법률이 문화자연·무형유산으로 분류되는 새로운 국가유산체계에 부합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재화의 성격을 지닌다고 지적받아온 문화재(文化財)의 명칭이 국가유산(國家遺産)으로 변경되었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3.7.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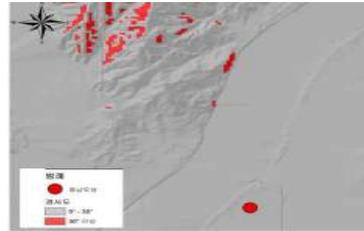
38) 최용호 외,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2013, 24쪽.

39) 『한국고고학강의』, 한국고고학회, 2007, 20쪽.

〈사진 4〉 통영시 항공사진 시기별 비교



〈사진 5〉 풍납토성의 경사도 분석



* 출처 : 김인수, 「매장문화재 조사방법을 활용한 전사자 유해발굴」, 2014,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또한 안신원은 전사자 유해발굴의 최우선 목표가 신원확인과의 전사자 유해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유해를 제외한 매장 방법, 매장 행위, 매장 환경 등의 고고학적 정보가 상대적으로 차순위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⁴¹⁾ 이러한 지적 이후 국유단 소속이었던 김인수는 고고학에서 진행 중인 매장문화재 조사방법들을 적용하여 전사자 유해발굴의 고고학적 전문성을 재고하고자 했다. 김인수는 지표조사 - 확인조사 - 발굴조사 - 후속조치 등 매장문화재의 발굴 절차를 전사자 유해발굴에 보다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제안했으며 〈사진 4, 5〉와 같이 항공사진과 GIS(지리 정보 체계)를 통한 경사도 분석 등 고지형환경분석을 통한 매장문화재 조사방법이 활용될 수 있음을 검토했다.⁴²⁾

이에 국유단은 창설 이후 위와 같은 학계의 지적을 반영하여 고고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을 채용하기 시작했고⁴³⁾ 전문성을 갖

40) 안신원, 「유해발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미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고고학』 제7-1호, 2008.

41) 안신원, 앞의 논문, 85-86쪽.

42) 김인수, 「매장문화재 조사방법을 활용한 전사자 유해발굴」, 고려대학교 고고미술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4.

43) 국유단은 현재 계획운영처 / 조사발굴처 / 신원확인처 / 감찰실 / 지원대대 등 크게 5개 부서로 운영되고 있다. 위 부서 중 발굴은 조사발굴처, 감식은 신원확인처

춘 발굴팀장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한 연구성과를 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최인건은 국유단에 근무하면서 전사자 유해발굴의 축적된 성과를 순차적으로 발표하기 시작했다.⁴⁴⁾

최인건은 6·25전쟁 당시 전투흔적(교통호·개인호 등)이나 전사자 유해, 유품 등도 과거의 상황을 간직하고 있으므로 문화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적-전투지역 / 유구-전투흔적 / 유물-유품과 같이 고고학적 매장문화재의 개념에 전사자 유해발굴의 개념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또한, 매장문화재 발굴기법을 적용하여 유해를 정밀 노출하고, 기록 후 수습하는 과정을 볼 때 전사자 유해발굴을 매장문화재의 범주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최인건은 2019년부터 비무장지대(DMZ)의 화살머리고지 유해발굴에 참여하여 발굴현황을 학계에 보고한 점이 주목된다.⁴⁵⁾

위와 같이 고고학 연구자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에 고고학적 조사방법론을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전사자 유해발굴이라는 새로운 분야를 이론적으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관한 고민도 시작했다.

에서 담당하고 있다. 감식 분야는 2007년 고고학, 인류학 등 관련 전공의 민간 감식전문가(감식관) 5명이 채용된 이후 꾸준히 전문인력을 채용해왔다. 발굴 분야는 각 팀의 발굴팀장을 관련 집체교육을 받은 부사관이 전담했다가 고고학 전공자도 점차 채용하는 추세이다. 최용호 외, 앞의 책, 2013, 235쪽; 국방부 유해발굴식단, 『유해발굴 20년사』, 2021, 12쪽.

44) 최인건 외, 「고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제4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한국고고학에서 다양성의 이해』, 한국고고학회, 2020; 최인건 외, 「현대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회 제6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고고학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근현대고고학의 중요성과 필요성』, 한국고고학회, 2022; 최인건, 「도서지역에서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국민방위군 사건을 중심으로-」, 『2023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문』 2, 2023;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본 6·25전쟁 문화유산」, 『제4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고고학으로 본 권력과 공간』, 한국고고학회, 2023.

45) 최인건 외, 위의 글, 2022.

대표적으로 김동일은 한국 근현대 사건들과 산업화 과정 역시 고고학에서 다뤄야 할 분야로 보고 이를 위한 고고학 용어의 정립을 위해 1950년대 영국에서 제시되었던 ‘산업고고학(Industrial archaeology)’⁴⁶⁾의 개념을 제안했다. 김동일은 영국의 산업혁명을 계기로 폭발적으로 증가한 산업문화의 유산을 이해하기 위해 성립된 산업고고학의 개념과 방법론을 통해 한국 근현대고고학을 이해하고자 했다. 그는 한국고고학이 1961년 대학에서 전문적으로 고고학을 교육하기 시작한 이래 국내외 이론과 방법론을 연구하고 수용해왔으므로 산업고고학 역시 선사고고학, 역사고고학, 동물고고학 등과 같이 고고학의 하위 분야로 이해할 수 있다고 보았다.⁴⁷⁾

〈표 1〉 고고학의 시대별 하위 분야와 시기구분

분류	시대
선사고고학	구석기시대
	신석기시대
	청동기시대
	초기철기-원삼국시대
역사고고학	삼국시대(가야 포함)
	통일신라시대(발해 포함)
	고려시대
	조선시대
근현대고고학 (산업고고학)	대한제국
	일제강점기
	대한민국

* 출처 : 김동일, 「한국의 산업고고학 연구」, 『영남고고학』 제88호, 2020, 180쪽.

46) 산업고고학이란 인류사회의 산업화 과정과 흔적을 기록·해석하고 보존하기 위해 국내에서는 조선후기부터 크게 유형과 무형유산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유형적 대상으로는 공장, 제련소, 교량 등의 건축 및 구조물과 그 외 장소, 기계 지도 재료 등이 포함되며 무형적 대상으로는 도시경관, 기술, 인물 관련 사항 등을 포함할 수도 있다. 박재민·성종상, 「산업유산 개념의 변천과 그 함의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21-1, 2012.

47) 김동일, 「한국의 산업고고학 연구」, 『영남고고학』 제88호 2020.

김동일은 산업고고학이 고고학의 하위개념이지만 동시에 현대에서 만들어진 개념으로서 필연적으로 근현대를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정보가 공개된 근현대 유산의 경우, 형식학적인 분류, 절대연대의 결정, 용도 파악이 불필요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기존 고고학의 개념과 차이가 크다고 판단했다. 김동일은 위와 같은 주장을 바탕으로 한국 산업고고학의 시간적 범위를 현재 한국근현대사의 범위와 동일하게 1876년 개항부터 현재까지로 보았는데 이에 따라 김동일은 전사자 유해발굴 역시 <표 1>의 산업고고학의 시간적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았다.⁴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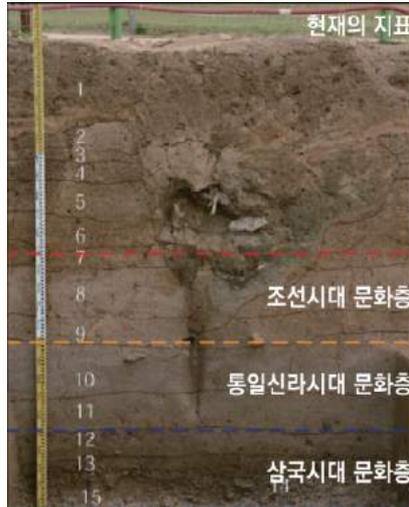
김동일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국내 상황에 맞는 산업고고학의 개념을 정리하여 이를 바탕으로 근현대고고학(Modern and Contemporary Archaeology)⁴⁹⁾의 필요성과 연구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노력하고 있다.⁵⁰⁾

48) 앞의 논문, 177-181쪽. 김동일과 이기성의 연구에서도 언급되지만, 유해발굴 분야는 일본 등지에서는 전적고고학(戰蹟考古學)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전적고고학은 전쟁 및 그 흔적과 관련된 고고학의 하위 분야이다. 여기서 전쟁 흔적이란 일본에서는 주로 제2차 세계대전 관련 유산을 말하며 한국의 경우는 전사자 유해발굴 관련 유적이라고 볼 수 있다.

49) 김동일의 연구에서도 보이는 경향이지만 근현대고고학 자체가 산업고고학의 개념에서 나왔기 때문에 산업고고학(Industrial archaeology)과 근현대고고학(Modern and Contemporary Archaeology)을 혼용해서 사용하는 경향이 있으며 이들 용어의 개념은 현재까지도 정립 중이다.

50) 김동일, 「근현대 고고학의 필요성과 연구방향성 제언」,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기술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2022.

〈사진 6〉 문화층(文化層)의 구분



* 출처 : 국립경주박물관 블로그
(<https://blog.naver.com/gymuseum/22163328414> 2023.10.5. 검색)

이기성은 근현대고고학의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더 명확하게 정리하면서 근현대 유적 발굴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이기성은 그동안 근현대고고학이 새로운 연구 분야로 주목받지 못했던 대표적인 이유로 고고학 연구자들이 근현대 유적을 고고자료로 보는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으로 보았다. 〈사진 6〉에서 보는 것처럼 고고학에서는 유적의 층위(層位)를 볼 때 시대별로 문화층(文化層)을 구분하는데 이 문화층에서 해당하는 유구를 노출하고 유물을 발굴한다. 그런데 근현대 관련 건물지나 유물은 모두 지표층(地表層)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고고학 연구자들은 이것을 유적으로 보기보다는 근현대의 교란층(攪亂層)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다.⁵¹⁾

51) 이기성, 「근·현대고고학과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고고학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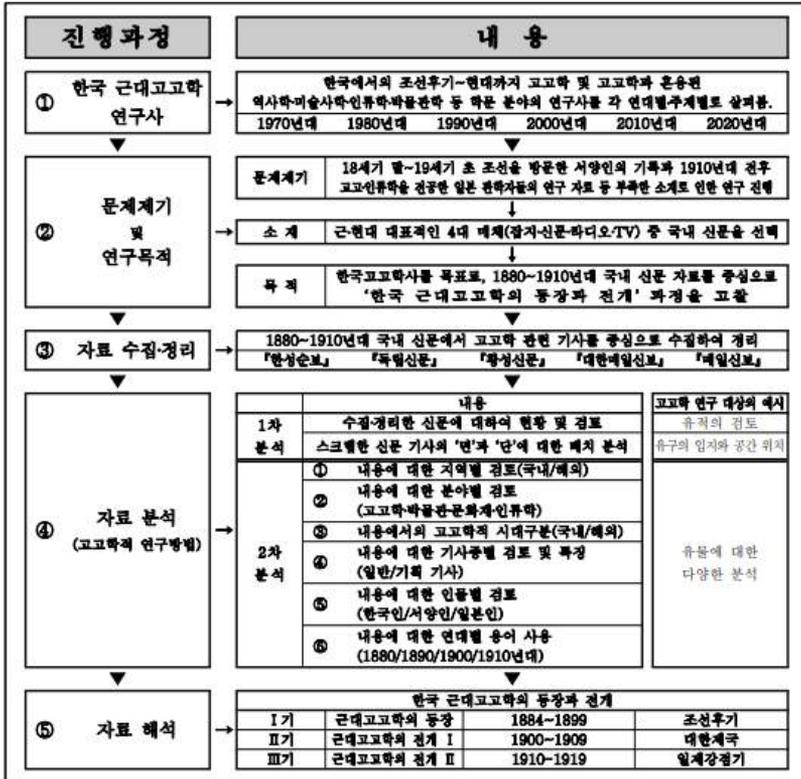
위와 같은 인식에 관해 이기성은 근현대 유적이 항상 남아 있는 것도 아니며, 일본 등 해외의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다양한 근현대 유적을 통해 문헌이나 사진 자료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당시의 사회상을 밝힐 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음을 지적했다. 따라서 위와 같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근현대고고학의 인식을 재고하는 한편, 근현대고고학의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발굴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았다.⁵²⁾

언급한 바와 같이 전사자 유해발굴 등 근현대 발굴 자료의 해석을 위해 한국 고고학계가 근현대고고학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확립하고자 하는 흐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⁵³⁾ 한편, 위와 같은 근현대고고학의 인식과 달리 새로운 방법론으로 근대고고학을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 방향이 있어서 주목된다.

제6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고고학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근현대고고학의 중요성과 필요성, 한국고고학회, 2022, 35-37쪽.

- 52) 위의 글, 38-45쪽. 이기성은 2010년경부터 한국고고학회가 문화재청 측에 일제강점기 건물지 등을 포함한 근현대 유적도 매장문화재 조사 실시 기준에 포함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히면서 근현대 유적을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3) 한국고고학회 제도교육개선위원회는 '근현대고고학'을 한국연구재단 학술 표준 분류 체계 추가 등록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고고학회, 「2024년도 제1차 평의원회 회의 결과」, 2024.

〈표 2〉 한국 근대고고학의 연구방법론



* 출처 : 김병철, 「한국 근대고고학의 등장과 전개」,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1, 10쪽.

김병철은 고고학사(考古學史)에서는 최초로 한국 근대고고학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고고학적 방법론을 통해 고찰하였다. 〈표 2〉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김병철은 고고학의 3대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유적(遺蹟), 유구(遺構), 유물(遺物)의 개념⁵⁴⁾을 주로 한국

54) 유물(遺物)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도구이다. 유구(遺構)는 인간의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것으로 파괴되지 않고서는 움직일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유적(遺蹟)은 유물, 유구의 공간적인 집합이다. 대부분 유물이 남아있는 밀집도나 빈도수에 의해 유적의 범위가 정해진다. 최성락, 『고고학 입문』, 학연문화사, 2005, 91~93쪽.

근현대사에서 1차 사료로 인식하는 신문자료에 적용하여 고고학적 방법론으로 문헌 자료를 해석하고자 시도했다. 김병철은 자신만의 새로운 방법론을 통해 『한성순보』, 『독립신문』,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매일신보』 등 1880-1910년대 신문자료에 수록되어 있는 고고학 관련 기사들을 해제(解題)하면서 한국 근대고고학의 개념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심도 있게 연구했다.⁵⁵⁾

〈표 3〉 근현대고고학을 바라보는 연구자별 관점

번호	구분	최인건 (현대 매장문화재, 2022)	김병철 (근대고고학, 2021)
1	유적 (遺蹟, Site)	전투지역 (고지군 등)	신문(원문)
2	유구 (遺構, Features)	전투흔적 (전투호/교통호 등)	신문기사(스크랩)
3	유물 (遺物, Artifacts)	전사자 유품	신문기사의 내용
기타	연대측정 (절대연대)	-	신문기사의 날짜

* 출처

- 최인건 외, 「현대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회 제6회 춘계학술대회』 2022
- 김병철, 「한국 근대고고학의 등장과 전개」,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1.

위와 같은 김병철의 새로운 관점은 〈표 3〉과 같이 유적을 현장의 전투지역, 유구를 전투흔적, 유물을 전사자 유품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한 최인건의 시각과 비교된다.⁵⁶⁾ 이와 같은 흐름은

55) 김병철, 「한국 근대고고학의 등장과 전개」, 목포대학교 일반대학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1.

56) 김병철은 근대고고학의 전개에 대해 연구하는 한편, 국유단 소속 발굴병으로 복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의 고고학적 성과를 검토하기도 했는데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해서는 최인건의 접근방식도 타당하다고 보았다. 김병철, 「국방부 유해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성과와 검토」,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기술의 고고학』, 한국고고학회, 2022.

향후 근현대고고학의 개념이 정립되고 연구성과가 축적되는 과정에서 주목해야 할 추이라고 볼 수 있다.

5. 6·25전쟁 전사자 연구의 향후 과제

지금까지 6·25전쟁 ‘전사자’와 전사자 ‘유해발굴’의 국내 연구 동향을 살펴보았다. 이번 장에서는 앞서 언급한 연구성과들을 중심으로 ‘사료’와 ‘현장’이라는 주제별로 6·25전쟁 전사자 연구의 향후 과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양영조(2016), 강인철(2019) 등의 선행연구에서 지적되었지만 6·25전쟁기 한국군은 전쟁 중 전사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예우할 것인지에 관한 경험 없이 전쟁을 수행했기 때문에 전사자에 관한 기록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었다.

위와 같은 기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은 크게 두 가지 연구 방향을 설정하기 시작했는데 전자는 국내 뿐만 아니라 국외의 사료를 발굴(發掘)하고 해제(解題)하여 연구의 밀도를 높이는 방향이고 후자는 다양한 범주의 사료를 기존 연구와 비교·검토하여 사료적 가치를 탐색하는 방향이다.

전자의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정선(2020)의 연구가 특히 주목할 만한데 이는 다음 <사진 7>의 사진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7〉 1950년대(상)와 2020년대(하) 전사자 유해발굴 감식 및 의례 비교



* 출처 : NARA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유해발굴 추진절차' (www.withcountry.mil.kr / 2023.10.5. 검색)

6·25전쟁기 일본 고쿠라 항에서 감식과 신원확인을 마친 전사자 유해는 입관을 거쳐 배편으로 1951년 3월부터 송환을 시작했으며, 1952년 4월 1일에는 고쿠라에서 접수된 약 1만 6천여구의 전사자 유해가 미국으로 송환되었다.⁵⁷⁾ 위와 같은 1950년대 미군의 감식과 송환 과정은 〈사진 7〉과 같이 현재 국유단이 취하고 있는 전사자 유해 감식 - 예우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국유단은 현재의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efense POW/MIA Accounting Agency, 약칭 'DPAA')⁵⁸⁾를 모

57) 이정선, 앞의 논문, 2020, 302쪽.

58) 미 육군 중앙유해감식소(CILHI)는 1973년 동남아시아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발굴을 목적으로 태일랜드에서 창설되었던 부대를 1976년 하와이로 이전하면서 편성되었다. 2003년 합동특수임무부대(JTF-FA)와 통합해 합동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로 개칭되었다. 2016년에는 미국 국방성 전쟁포로실종자 사무소(DPMO), 미 공군 생명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을 통합하여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

델로 창설되었다. 따라서 이정선의 연구는 현재 전사자 유해발굴 - 신원확인(감식) - 송환 및 안장으로 이어지는 한미 양국의 전사자 보훈 체계가 1950년대부터 이미 정립되었다는 근거를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향후 NARA 자료 등을 중심으로 외국의 새로운 사료를 발굴하여 부족한 전사자 기록을 보완하는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한 사료의 범주를 다양화하고 이를 기존 연구와 비교·검토하는 후자의 연구 방향은 고종성(2022)이 시도하고 있는데 앞서 언급했듯이 고종성은 기존 문헌 자료 중심의 1차 사료와 더불어 전사자 유해 정보와 유품 등도 하나의 사료로 보고 그 가치를 검토해나가고 있다.

앞서 고종성이 확인한 전사자 유품 중에 족청의 버클은 6·25 전쟁기 족청계의 영향력과 움직임에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전사자 유품 등의 사료를 기존 1차 사료와 비교·검토하는 연구는 해당 전사자의 행적을 추적하는 중요한 과정이자 반드시 필요한 연구 방향이 될 것이다.⁵⁹⁾

중자 확인국(DPAA)으로 확대 개편되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출범하였다. 고종성, 앞의 논문, 2022, 16쪽.

- 59) 조선민족청년단, 그리고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 과정을 심층적으로 연구한 연구자로는 후지이 다케시가 대표적이다. 이후 김지훈은 위와 같은 족청계를 한국군 정훈(政訓)도입의 주체로 보기도 했다. 또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는 아직 완벽히 해제되지 않은 조선민족청년단 단보(朝鮮民族青年團 團報) 등 상당한 사료를 소장하고 있다.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역사비평사, 2012; 김지훈, 「창군기 한국군 정훈의 도입 과정과 중국국민당 정공의 변용」, 『역사와 현실』, 제104호, 2017; 후지이 다케시, 「조선민족청년단 단보와 자료적 가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3.

〈사진 8〉 지평리 인근 공산군 진지를 미군이 습격한 뒤 참호에 있는 미군과 중공군 유해(1951.02.17.)



〈사진 9〉 고 조응성 하사 유해 노출 (2021년 철원 백마고지 출토)



* 출처 : NARA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Aerial and Panoramic Photographs of Various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1942 - 1964; 최인건, 앞의 글, 2022, 22쪽.

한편, 전사자를 ‘현장’에서 조사하고 연구하는 전사자 ‘유해발굴’ 분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 유해발굴을 근현대고고학의 시각에서 해석하려는 시도가 이뤄지고 있으나 아쉽게도 심층적인 연구가 축적되지는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향후 추구해야 할 방향은 명확하다.

발굴(發掘)이란 본래 땅속에 묻혀있는 것을 찾아서 파낸다는 의미와 더불어 세상의 알려지지 않은 유무형의 사실을 찾아낸다는 뜻도 같이 담겨 있다.⁶⁰⁾ 사료발굴과 유해발굴 역시 특정 학문에 따라 발굴의 대상과 관점이 다를 수 있지만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다는 점에서 그 궤를 같이 한다고 볼 수도 있다.

〈사진 8〉은 양평 지평리 전투 중 확인된 미군과 중공군의 사진 자료이고 〈사진 9〉은 철원 백마고지에서 발굴된 한국군 전사자의 유해 노출 사진이다. 위 두 가지 사진의 전투 장소와 전사자의 신원 또한 각양각색이다. 이처럼 한국현대사를 연구하기 위한 1차 사료 역시 중요하지만, 현재까지 남아 있는 현장의 흔

60)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적은 앞선 문헌과 사진 등의 기록과는 또 다른 형태일 수 있다. 근현대고고학 역시 발굴현장에 남아 있는 고고학적 맥락(Context)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한국근현대사의 사료와 기록 등을 교차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땅속에 혼재된 전사자를 혼동 없이 연구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양한 분야에서 각자의 연구결과에 관한 상호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근현대사와 한국고고학간의 다양한 학제 간 교류가 필요할 것이며 각각의 연구방법론의 차용 역시 긴요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또한, 한국현대사와 한국고고학 분야 모두 공통적으로 구술사(口述史)를 활용하여 전사자를 연구하려고 시도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관련 연구성과가 미미하므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⁶¹⁾

마지막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은 최근 역사학과 고고학 이외에 다양한 분야에서 그 연구가 활성화되고 있다. 전사자 유해발굴을 예우와 보훈의 시각으로 바라본 보훈 분야⁶²⁾, 전사자 유해발

61) 전사자 유해발굴에 구술사를 적용하려고 시도한 연구는 강정덕의 연구가 있다. 강정덕은 국유단 조사업무를 수행하면서 도출한 자료를 토대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조사업무의 방향에 관해 고찰하였다. 하지만 강정덕의 연구에서 적용된 참전 군인 혹은 전사자 유가족에 관한 증언은 구술채록과 활용 방법에 있어서 한국현대사에서 채택하고 있는 구술사 연구방법론과 차이점을 지닌다. 고고학 연구자들 또한, 근현대 유적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유적 근처 주민들의 인터뷰를 수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것 역시 구술사 방법론으로 보기에는 매우 1차적이라고 볼 수 있다. 6·25전쟁 생존 장병이나 유가족 그리고 전투지역내 주민들의 증언(證言)은 전사자 연구에서 있어서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에 관해서는 후속연구에 맡겨두고자 한다. 강정덕,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과 유해소재 조사업무의 역할」,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융합산업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62) 양병기, 「한국전쟁 시기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중원문화연구총서』, 2002; 이기오, 「보훈선양정책측면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연구」, 『군사』 제71호, 2009; 조석근, 「6·25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함의한 정신적 가치 연구」, 『군사』 제71호, 2009; 길병욱, 「전시유해발굴 사업과 국가의 책임성에 관한 연구」, 『한국동북아논총』 56권, 2010; 최용호·오흥국, 「6·25전사자 유해발굴과 호국용사 명예선양 방안」, 『한국보훈논총』, 2015; 윤지원, 「비무장지대(DMZ) 내 625 전사자 유해발굴의 중요성과 의의에 대한 고찰」, 『한국과 국제사회』, 2022.

굴을 통해서 얻은 각종 데이터를 축적하는 전사자종합정보체계(KIATIS : Killed in Action Information System)를 비롯해 관련 기록의 보관과 활용방안을 연구하는 기록학 분야⁶³⁾, 전사자 유품을 보존처리하고 연구하는 보존과학⁶⁴⁾, 그리고 3D 스캔과 VR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미래지향적인 연구까지 이뤄지고 있다.⁶⁵⁾ 본고에서 이에 관한 연구성과를 모두 다룰 수는 없지만, 이 부분 역시 다양한 학제 간 교류를 통해 융합적인 전사자 유해발굴 연구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
- 63) 김민정, 「유해발굴 조사기록의 관리방안 연구 :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중심으로」, 중부대학교 기록물관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9; 심종보, 「한국전쟁 유해 발굴 사업 관련기관의 기록물관리 현황」, 경북대학교 기록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0; 김상민,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발굴조사기록체제의 개선방안 연구」, 원광대학교 사학과 기록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2022; 김세현, 「전사자 데이터세트 기록관리 방안 연구」, 서울대학교 협동과정 기록학전공 석사학위 논문, 2023; 변선영, 「2020년 육군 6·25전쟁기록의 유형과 가치 -육군 6·25전쟁기록의 국가등록문화재 지정과 관련하여-」, 『기록과 정보·문화 연구』, 2020; 「한국전쟁기 경남 함양군 전쟁 기록 연구 : 육군의 6·25전쟁 군사기록물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2023.
- 64) 문화재청은 전사자 예우 조치의 일환으로 국립문화재연구소를 통해 2020년부터 매년 주요 전사자 유품을 국유단으로부터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담당하는 협업을 지속하고 있다. 「문화재청 보도자료, 2023.9.1.」 이에 2020년을 전후하여 전사자 유품에 관한 보존처리가 활성화되고 있으며 최근 연구성과는 아래와 같다. 조하늬 외, 「비무장지대 한국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수습 철제 총기류의 보존처리와 탈염 처리 방법 고찰」, 『보존과학회지』, 2021; 양의진 외, 「대전 보훈공원 전시실 소장 6·25 전사자 유품의 과학적 보존처리」, 『문화재 보존연구』, 서울역사박물관, 2021; 박민선 외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과학적 보존 : 지상작전사령부 소장 지역유품 중심으로」, 『보존과학회지』, 2022; 오승준·위광철, 「비무장지대 출토 군화의 형태 복원을 위한 3차원 디지털 기술의 적용 및 보존처리」, 『문화재』, 2023; 국립문화재연구원,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 발표 논문집』, 2023; 『DMZ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유품 보존처리』, 2024.
- 65) 정상훈, 「유해발굴감식단의 교육훈련을 위한 VR기술 적용에 관한 연구」, 배제대학교 컴퓨터공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2; 안형기 외, 「전쟁 문화유산 디지털 재현을 위한 방독면 3D 가상 복원 및 융합 활용 연구」, 『사물인터넷융복합논문지』, 2023.

6. 맺음말

지금까지 전사자 유해발굴의 국내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과제를 진단해보았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은 단어 그대로 6·25전쟁 당시 전사한 ‘전사자’를 ‘유해발굴’이라는 방식으로 연구한다는 의미에 다름아니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6·25전쟁 전사자의 사회적 인식 변화 양상을 소개하는 한편,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다양한 국내외 사료를 중심으로 한국현대사의 연구성과를 살펴보았으며, 전사자를 연구하는 방법론 중의 하나인 ‘유해발굴’에 관해서는 한국고고학 분야의 최근 연구성과를 정리했다.

전사자 유해발굴은 당초 인류학 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초기 연구가 시작됐다. 그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을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상징으로 보는 한편, 국민의 사회소속감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로 해석했다.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인류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위와 같은 선행연구를 통해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사료와 기록의 부족이 지적되자 한국현대사 연구자들은 공간적으로는 국내를 넘어 국외의 사료들을 발굴하는 한편, 내부적으로는 다양한 범주의 사료와 기존 연구 간의 비교·검토 과정을 거치며 사료적 가치를 탐색했다.

한국고고학 역시 인간의 죽음을 통해 인간의 문화적 행위를 재구성하고 사회의 과거사를 밝혀내고자 노력해왔다. 이에 과거

뿐만 아니라 근현대의 과정까지도 고고학에서 다뤄야 할 분야로 판단한 고고학 연구자들은 전사자 ‘유해발굴’에 고고학적 조사방법론을 적용하고자 노력하는 한편, 해외 산업고고학 개념을 기반으로 한 이른바 ‘근현대고고학’의 시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연구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처럼 다양한 분야에서 이뤄지는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한 연구들은 학제 간 교류를 통해 더욱 심층적인 비교·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6·25전쟁 70주년인 2020년을 전후로 전사자 유해발굴의 범위가 비무장지대(DMZ)까지 확장되는 등 성과가 축적되자 주목할 만한 연구들이 보고되며 전사자 연구가 다양성을 갖추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를 넘어 국제적으로도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6·12 싱가포르 선언 등에서 남·북과 미·북의 정상들이 모두 각국의 전사자 유해발굴과 송환을 합의하면서 전사자 유해발굴 문제는 전쟁 종식의 종착점으로 가시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한국과 미국의 합동 유해발굴은 물론, 한·중 유해발굴 송환 사업에 이어 미·중 유해발굴 사업에 관한 협의 또한 인도주의적인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다.⁶⁶⁾

정전협정 70주년이 지난 현시점에서 6·25전쟁 전사자에 관한 다양한 연구는 전쟁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죽음에 대한 우리의 자세를 재검토하게 함으로써 6·25전쟁의 전장정리(戰場整理)⁶⁷⁾ 즉, 6·25전쟁의 진정한 이해에 도움을 줄 것이다.

66) 대한민국 정부는 2014년부터 중국과 협의를 거쳐 국내에서 발굴한 중공군 전사자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했다. 2023년에는 미국이 한·미·중 3국이 유해발굴 관련 과학·기술 교류에서 시작해 신뢰가 쌓이면 6·25전쟁 전사자의 공동 유해 조사·발굴까지 나아가는 방안도 구상해 한국에 제안한 바 있다. 「중국, 자국 내 2차대전 미군 유해 발굴 협력 4년여만에 재개」, 《연합뉴스》, 2024년 2월 29일자.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4536594?sid=104>)

67) 이상호, 앞의 논문, 106쪽.

〈참고문헌〉

1. 사료

NARA 소장, 국립중앙도서관 수집, RG 92, Records of the Office of the Quartermaster General, Copies of Unclassified Documents Relating to the QM Corps in the Korean War 1948-52, Graves Registration thru Brig. Gen. Hastings Folder(1).

NARA 소장,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RG 319 Records of the Army Staff, 1903-2009, Aerial and Panoramic Photographs of Various Countries and the United States, 1942-1964.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2001.

2. 공간사(公刊史) 및 보고서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유해소재 분석지도 (DMZ/남한지역)』, 2009. <http://uci.or.kr//G901:A-0007155484@N2M>

_____, 『6·25전쟁 유해소재 분석 지도(북한지역)』, 2010. <http://uci.or.kr//G901:A-0006345518@N2M>

_____, 『6·25전쟁기 유엔군 군사지원체제』, 2022. <http://uci.or.kr//G901:A-0010873745@N2M>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유해감식 결과 보고서』, 2013.

_____,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http://uci.or.kr//G901:A-0006452306@N2M>

_____, 『유해발굴 20년사』, 2021.

<https://doi.org/10.978.8997748/501>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4년 6·25 전사자 유해 발굴보고서』, 2004.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5년 6·25 전사자 유해 발굴보고서』, 2005.

3. 저서 및 단행본

- 강인철, 『전쟁과 희생 :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http://uci.or.kr/I410-ECN-0199-2020-334-000027663@N2M>
- 다카하시 테쓰야 저, 이목 옮김, 『국가와 희생』, 책과 함께, 2008.
<https://doi.org/10.978.8991221/338>
- 박선주, 『생물인류학』, 충북대학교출판부, 2003.
<https://doi.org/10.978.897295/1797>
- 조지 L. 모스 저, 오윤성 역, 『전사자 숭배 : 국가라는 종교의 희생제물』, 문학동네, 2015. <https://doi.org/10.978.89546/35752>
- 최성락, 『고고학 입문』, 학연문화사, 2005.
- 하상복, 『죽은자의 정치학』, 모티브북, 2014.
<http://uci.or.kr/G901:A-0006468651@N2M>
- 한국고고학회, 『한국고고학강의』, 2007.

4. 논문

- 고종성,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군사』 제123호, 2022.
<http://uci.or.kr/G901:A-0010793149@N2M>
- 김동일, 「한국의 산업고고학 연구」, 『영남고고학』 제88호 2020.
<http://doi.org/10.47417/yar.2020.88.175>
- 김병철, 「한국 근대고고학의 등장과 전개」, 목포대학교 고고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2021.
<http://uci.or.kr/I804:46002-000000023150@N2M>
- 김성보, 「한국전쟁기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전쟁사 연구의 과제」, 『중원문화연구총서』, 2002.
<http://uci.or.kr/G701:A-00123514765@N2M>

- 김인수, 「매장문화재 조사방법을 활용한 전사자 유해발굴」, 고려대학교 고고미술학과 석사학위논문, 2014.
- 노용석, 「죽은 자의 몸과 근대성 : 한국의 전사자, 민간인 피학살자 유해 발굴 연구」, 『기억과 전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10.
<http://uci.or.kr//G901:A-0002864481@N2M>
- 박동찬, 「1951~1953년 화살머리고지 전투의 시기별 양상과 특징」, 『6·25 전쟁과 철원』, 태봉학회, 2020.
<https://doi.org/10.978.896246/4368>
- 박선주, 「6.25전사자 유해발굴조사 : 6.25 전사자유해의 인류학적 조사 - 2000~2002년도 발굴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6호, 2002.
<http://uci.or.kr//G901:A-0002007425@N2M>
- _____, 「6.25 전사자유해 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보』 제33호, 2006.
<http://uci.or.kr//G901:A-0002310145@N2M>
- 박중섭, 「한국전쟁 사망군인 유해발굴의 인도법적 의의」, 『인도법논총』, 2006.
<http://uci.or.kr//I410-ECN-0101-2010-338-003183940@N2M>
- 안신원, 「유해발굴의 현황과 문제점 그리고 의미에 대한 고고학적 고찰」, 『고고학』 제7-1호, 2008.
<http://uci.or.kr//G901:A-0003448767@N2M>
- 이남우, 「전시체제의 한국군 상·장례 절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장례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http://uci.or.kr//G901:A-0005244870@N2M>
- 이상호, 「베트남전쟁 파병 국군 전사자 현황과 국내 언론 보도」, 『역사와 현실』 제116호, 2020.
<http://uci.or.kr//I410-ECN-0101-2020-911-000839510@N2M>
- 이윤정, 「한국전쟁기 경찰 전사자 의례와 기록사진」, 『한국연구』, 2022.
<http://uci.or.kr//G901:A-0010930742@N2M>

이정선, 「한국전쟁기 유엔묘지에는 왜 미군 전사자가 안장되지 않았는가? -미군 전사자 유해의 전시 중 동시 송환 정책과 일본 고쿠라(小倉)에서의 신원 확인을 중심으로-」, 『항도부산』 제40호, 2020.

<http://uci.or.kr//I410-ECN-0102-2021-900-001021819@N2M>

조성훈, 「정전협정 직후 유해교환 성과와 한계 재조명」, 『한국정치외교사논총』 42집, 2020.

<http://doi.org/10.33127/kdps.2020.42.1.197>

최호근, 「제1차 세계대전과 독일의 전사자 송배 -플랑드르 지역의 군인 묘지를 중심으로-」, 『서양사론』, 제155호, 2022.

<http://uci.or.kr//G901:A-0011035362@N2M>

5. 발표문 및 논고

권헌익, 「전사자 유해와 현대사회」, 『2004년 6·25전사자 유해 발굴 보고서』, 육군본부·충북대학교 중원문화연구소 유해발굴센터, 2004.

김동일, 「근현대 고고학의 필요성과 연구방향성 제언」,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기술의 고고학』, 2022.

김병철, 「국방부 유해발굴조사의 고고학적 성과와 검토」, 『제46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기술의 고고학』, 2022.

박선주,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발굴과 보존」,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보존과 활용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국립문화재연구원 문화재보존과학센터, 2023.

양영조, 「6·25전쟁과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이기성, 「근·현대고고학과 매장문화재 보존 및 제도 개선 방안」, 『한국고고학회 제6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고고학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근현대고고학의 중요성과 필요성』, 한국고고학회, 2022.

- 최인건 외, 「고고학의 관점에서 바라본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제44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한국고고학에서 다양성의 이해』,
한국고고학회 2020.
- 최인건·안순찬, 「현대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6·25전쟁 전사자 유해
발굴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회 제6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문』,
한국고고학회, 2022.
- 최인건, 「도서지역에서의 6·25 전사자 유해발굴 -국민방위군 사건을
중심으로-」, 『2023 전국해양문화학자대회 발표문』 2, 2023.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본 6·25전쟁 문화유산」, 『제47회
한국고고학전국대회 : 고고학으로 본 권력과 공간』, 한국고고학회,
2023.

<Abstract>

**Trends and Challenges in Research on Excavation of the
Korean War Fallen
– Focusing on Historical Records and Fields –**

**Ko Jong Sung
(National Museum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This article summarized research trends on excavation of the Korean War Fallen since the 2000s. Although the most of this study was done within the category of Korean contemporary history, it also covered a number of recent works in adjacent fields such as anthropology and archaeology, due to the nature of the topic.

The early research of the topic had begun by anthropologists; they viewed the subject as a major symbol of establish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civil society, while seeing it as an example of the people's sense of social belonging as well. They had also emphasized the need for various approaches in terms of historical as well as anthropological knowledge for in-depth research.

As the above prior research pointed out the lack of historical records on the "dead" of the Korean War, researchers on Korean contemporary history are discovering overseas records, while internally diversifying the scope of records and value them through comparison and review with existing studies.

Korean archaeology has also tried to reconstruct human cultural behavior and uncover the past history of society through human death. The researchers who judged not only the past but also modern & contemporary processes as an area to be dealt with in archaeology

are trying to apply archaeological research methodology, while also studying from the perspective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chaeology", based on the concept of overseas industrial archaeology.

As research achievements were accumulated around 2020, the 70th anniversary of the Korean War, such as the excavation being expanded to the Demilitarized Zone (DMZ), some notable studies were submitted and the study itself began to be diversified. At this point of passing through the 70th anniversary of the Cease-fire, various studies on the subject help us to truly understand the Korean War by reviewing our attitude toward the deaths that inevitably accompany the war.

Keywords: Korean War, ROK Army, the war fallen, Excavation of the human remains, Human remains,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MAKRI), Modern and Contemporary Archaeology

